

# 실질 총소득 성장률 換亂 후 ‘최악’

## 3분기 성장률 3%대 추락 ... 3년만에 최저

고유가로 무역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를 받쳐온 제조업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08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I는 전기대비 3.0%, 작년 동기 대비 3.

2% 감소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GDI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로,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의 체감 경기가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 GDI가 악화된 것은 고유가로 인해 무역손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3분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은 전분

기 26조 7천억 원에서 33조 2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9% 성장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2004년 3분기(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2005년 2분기(3.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0.8%로 반 토막 난 뒤 3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 둔화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제조업은 전분기 2.2%에서 0.4% 성장에 그쳤다. 건설업은 전

분기 -2.4%에서 1.5% 증가로 돌아섰지만 이는 전기의 낮은 수준에 대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업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성장률이 감소로 돌아서고 금융보험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기 대비 0.2% 성장에 머물렀다.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도 성장률 하락에 주요 원인이었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지출이 부진하면서 전기 대비 0.1% 늘어났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2.3% 증가했다. /연합뉴스

### 시 설

## ‘복마전’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노인성 질환이나 말기 환자 등을 위한 요양시설이 국고보조금을 빼먹는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잇따라 광주·전남 53개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8개 요양병원과 3개 요양원을 적발하고 전 시의원과 공무원, 의사 등 관련자 27명을 기소했다. 이들 요양시설에서 새나간 지출이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지출이 부진하면서 전기 대비 0.1% 늘어났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2.3% 증가했다.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의료급여가 병약한 노인이나 죽음을 코앞에 둔 환자가 아닌 전 시의원, 의사, 공무원, 관책은행 간부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보조금을 눈먼 돈인 줄 알고 빼돌린 요양시설도 문제지만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됐다.

불·탈법 수법은 전방위적이다. 전 시의원이 건 복지재단은 허위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줬다.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거나 복지시설에 돈을 집어주고 '가짜'를 하며 환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건강심사평가원은 허위 청구된 의료급여 서류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불·탈법을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한 마당에 인력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런 현실에선 복지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복지수준은 나아질 수 없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의 요양시설로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 허가와 배정된 요양시설도 문제지만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됐다.

## 정치권, 회기내 국감제도 ‘개선’ 주목한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감됐다. 20일동안 진행된 국정감사는 육설과 고한, 부실한 답변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실시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감현장은 전·현직 정권의 실정 들춰내기 경합장으로 변질됐고 정책보다는 정쟁이 판을 쳤다. 여야 모두 정책급을 다잡했지만 구태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부실 감사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20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500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감은 수백 걸음에 그쳤고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등도 여전했다. 피감기관 입원이 국감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태

까지 발생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없으면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유신 이후 중단된 국정감사가 20여년 전 민주당 바람을 타고 부활된 것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국민의 주문이라 할 수 있다.

공감대는 형성됐다. 여야도 모두 제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시 국감제도 도입과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 지적사항을 바로 잡지 않는 피감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의지와 노력이다. 20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500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감은 수백 걸음에 그쳤고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등도 여전했다. 피감기관 입원이 국감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태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과 평화네트워크는 24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외의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8 광주 평화회의'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08 광주평화회의’ 호남대서 열려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과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한 '2008 광주평화회의'가 24일 오후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와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발제 및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중국·일본 교수 등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의미와 과제, 동북아 군비경쟁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공동체'라는 강연에서 '남북이 화해·협력해야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이 가능하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 형성·유지의 단초를 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축, 군축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대병원 분만비 가장 비싸다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 본인부담액 121만원... 제왕절개 진료비 419만원

#### 국회 보건복지부 자료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전남대병원의 출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24일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비의 경우 평균 163만1천8천원이 들며, 본인부담금은 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별로는 전남대학교 병원의 자연분만비가 265만5천원이 들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쌌으며 본인부담액도 121만3천원으로 서울대 병원의 134만3천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 자연분만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충북대병원으로 모두 72만원이 들며 본인부담액은 10만4천원에 불과했다.

1위 병원과의 차이도 커서 진료비차는 193만5천원이며 본인부담금 차이는 123만9천원이었다.

제왕절개분만 진료비의 경우에도 전남대병원이 가장 높아 419만1천원이나 들었으며 이중 본인부담액은 218만7천원이었다. 본인부담액은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아 229만8천원이었다.

제왕절개의 경우도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충북대병원으로 137만2천원이나

들었으며 본인부담은 70만1천원에 불과, 최고 비용 병원과의 차이가 전체 진료비 기준 281만8천원, 본인부담금 기준 159만7천원이 나왔다.

이처럼 분만비 차이가 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고난이도 자연분만 환자가 몰리거나 과잉진료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출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70%를 넘는 선택진료비를 축소하고 자연분만의 의료수가 인상을 통한 제왕절개 분만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 주성영 의원 고소

### ‘비자금 의혹’ 명예훼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오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모은행이 2006년 2월8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인 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소장에서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으며 신중함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절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농업박람회 700만불 수출 계약

24일 개막된 '제 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전남도가 해외 바이어들과 700만 달러의 친환경 농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계약은 전남도 경제과학국 통상수출과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광주·전남 지사가 공동으로 바이어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

이번 수출계약에는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7개국 농산물 바이어 17명과 해남 화훼협회 등 도내 수출농·업체 50곳이 참가했다. /송기동기자 song@

#### 대우조선 우선협상자

### 한화컨소시엄 선정

한화가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대우조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은행은 24일 한화컨소시엄을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입찰 가격과 입찰자의 경영능력, 인수후 발전 계획과 시너지, 자금조달 계획, 노사관계 안정 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심사, 평가해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다음달 초부터 3~4주간 확인 실사를 하고 가격 조정 협상을 벌여 연내에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도대체 밑바닥을 모르는 세상

## “위기의 전남 조선산업 금융지원을”

### 전남도의회 ‘축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전남지역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전남도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정부는 전남의 조선산업이 지역경제 및 수출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 지역 조선산업과 기자재 산업의 전략적 육성 의지

를 밝힐 것과 ▲조선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대형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전략적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현(민주당·강진)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정부는 지역 조선산업 육성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개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전남 직불금 신고 공무원 1,581명

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 닷새째인 24일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천581명이 신고를 마쳤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4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 수령을 규탄하고 농가대책을 요구했다.

연맹은 "직불금 불법수령 사태는 빛 갚을 걱정엔 막막하지만 한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의욕마저 빼앗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직불금 불법수령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일까지 실제 경작여부를 조사한 뒤 31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4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 수령을 규탄하고 농가대책을 요구했다.

연맹은 "직불금 불법수령 사태는 빛 갚을 걱정엔 막막하지만 한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의욕마저 빼앗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직불금 불법수령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에 국립미술관 건립 필요”

### 한나라 이정현 의원 주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들어설 광주에 국립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광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향이고, 특히 남도화와 남도 불꽃씨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장르가 되었고 세기의 대작가들이 즐비하다"며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 변변한 국립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문화수준을 짐작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구체적인 실현 사례는 문

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광주유치와 국립미술관 광주 건립"이라며 "최소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라도 건립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향이고, 특히 남도화와 남도 불꽃씨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장르가 되었고 세기의 대작가들이 즐비하다"며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 변변한 국립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문화수준을 짐작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구체적인 실현 사례는 문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19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문 화 회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문 화 생 활 부 2200-626 <F A X 227-9500>	광 고 미 케 링 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여 론 제 작 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서 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